

김병준 "국회가 안 받아주면 결과수용"

"모든 것 국회·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3야,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으로 첫 관문부터 난항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총리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의 임명 반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전히 총리직 수락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어 정상적인 총리 임명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회가 닿는대로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던 마음과 국정이 단 하루도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 밖에 없다"며 "그래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제가 두 말 없이 수용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통력의 원천이 된다"며 "(총리가 된다면)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의 반발이 심한 만큼 그의 총리 인준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또한 김 후보자에게 총리직 수락 철회를 요구하는 등 자신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 인사청문회는 총리 인준 절차의 첫 관문인 셈이다. 하지만 야 3당이 보이콧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법 9조3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야 3당의 보이콧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부는 정치적



새누리도 공범 민중의 꿈 서울지역 회원들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순실에 이어 감옥으로 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형상의 가면을 쓴 두 사람을 쇠사슬로 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당분간 정치권에 서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해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표결로 통과되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 129석·민주당 121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무소속 6석이다. 야권이 반대한다면 김 후보자의 국회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인준 때까지는 김 후보자는 '총리 후보'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한다. 일정기간의 총리 공백상태는 불가피하다.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

입된 이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도 적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총리 후보자였던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총리 서리에 임명됐으나,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곧이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바 있다. /뉴스

안민석 "최순실·장시호, 특정연예인 특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연예계 사업에 침투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특정연예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 뒤 "시호 씨가 지금까지 최순실 씨와 함께 연예계 사업에 뛰어들어서 연예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며 "승마 특혜로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간 다음에는 레저, 연예, 그 쪽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에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유명한 연예인 축구단인 회오리 축구단을 다니면서 밥을 사준다. 그래서 연예계 자락을 쪽 만들어놓는다"며 "지금은 대형기획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획사를 키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시호 씨와도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 가수가 국제행사에서 생뚱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초대돼 노래를 부른다"며 "이것 역시도 배경에 최순실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 가수가 능력이 없는 가수가 아니다. 노래도 잘 한다. 나도 좋아하는 가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라고 보기에 그 정도 급의 가수들은 여러 명이 있다"며 "그런데 유독 그 가수만 싸움이 하는 그런 형태가 지난 몇 년 동안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뉴스

안전업무 모르는 박승주, '한국안전' 잘 이끌까?

안전분야 비전문가인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콘트론타워 수장으로 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임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전격 임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문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신선했던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이 취임 2년을 앞두고 전격 교체된 셈이다.

3일 정부추에 따르면 이번엔 안전처 장관으로 발탁된 박승주 전 차관은 정통 내부관료 출신으로 '지방자치' 전문가다.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자치부 등 내무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런 경험으로 안전처 내부에서는 박 내정자가 조직 관리 등에 있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 수장으로서 적임자냐는 점에서는 이론이 제기된다.

박 장관도 안전 업무가 생소하다고 인정하는 입장이다. 박 내정자는 개각 명단 발표직후 가진 뉴스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동안 정부혁신 일을 많이 해 일하는 방법은 안다"식으로 애들러 답변했다.

그러면서 "각 분야의 구체적인 콘텐트는 전문가(공무원)들이 있으니 이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전문성으로 자신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들어 각종 재난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에게 안전업무 수장자리를 맡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

이름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안전업무는 단순히 행정업무를 오래 근무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컨트롤 업무를 새롭게 짜는 상황에서는 수장이 책임지고 진두지휘해야 한다"며 "비전문가가 이런 총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처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안전과 소방을 총괄한 행정자치부에서 오랜기간 근무했다"며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

최인정, 학교 폐석면 처리 '분담이행 계약' 촉구

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교육위원회)은 도교육청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방식의 시급한 개선을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의 분담이행 비율이 17.4%에 불과해 계약방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담이행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처리시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분업체 등 3단계에 적격한 업체가 모두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도교육청의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주로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체결이 이뤄져 폐석면 처리 일관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분담이행 비율은 0.0%, 2015년 6.5%, 2016년 32.9%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는 관리감독 주체인 도교육청 본청은 물론 지역별로도 전혀 분담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무려 9곳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폐석면은 해체·제거 작업 이후 발생하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 가루형태의 폐석면과 작업에 사용된 바다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장갑 등 장비의 중간처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수집운반업체만 계약이 이뤄질 경우 중간처리와 최종처분을 업체 신고에 의해서만 확인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한 경우 대부분 업체들이 중간처리와 최종처분을 타

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분담이행 비율 17.4%

지역에서 처리해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폐석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3단계 적격업체가 모두 참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경우 처리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문정권 기자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금강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습니다.

KFD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